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9. 15
복지환경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8. 26 김민숙 의원 외 14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9. 1.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 9. 15.)

상정, 질의, 심사, 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민숙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수 있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음.
- 저출생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책 대상을 임신, 출산, 양육 시기 여성의 역할로만 규정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양육 주체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극복과 인구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장려’를 ‘저출생극복’으로 용어를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문상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성차별적 요소로 오인될 수 있어 조례 명과 조례 내용에 있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아이가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조례명의 “출산장려”를 “저출생극복” 조례 내용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 저출산 용어는 오랜기간 동안 법령이나 정책 등에서 공식화 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점,
- 저출산 용어는 이미 정책의 흐름이 임신,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서

존중하되 사회 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 사회공감대 형성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 사 결 과 : 부결

Ⅴ.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